



EU의 은행 경영진 상여금 규제안

이경아 연구원

- 3월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(EU) 재무장관회의에서 은행 경영진 상여금 규제안에 대한 최종 합의 여부가 논의되었음.
 - 은행 경영진 보너스 규제안은 은행 임원의 상여금이 연간 보수에 1:1로 연동(bonus to salary 1:1)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, 주주들이 동의할 경우 최대 두 배까지 늘어날 수 있음.
 - 이 규제안은 지난 달 28일 유럽의회와 EU 집행위원회에서 합의되었고 최종합의를 위해 이번 EU 재무장관회의에서 다시 논의되었으며, 최종적으로 유럽의회와 EU 정상회의의 승인을 통해 확정되게 됨.
 - 회원국 과반수의 동의로 법안이 가결될 경우 유럽 은행들과 유럽에서 영업하는 외국 은행들이 적용 대상임.

- 영국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이번 회의에서 최종적인 합의 도출에는 이르지 못하였음.
 - 영국 정부는 EU 차원의 강도 높은 규제가 시행될 경우 자국에서 영업 중인 대다수 은행들이 이탈, 자국의 금융허브로서의 지위가 약화될 것을 우려하며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해왔음.
 -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“지금 당장 이 제안을 지지할 수는 없으며, 향후 몇 주 동안의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내용이 진전되면 이 안을 지지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
 - 영국 은행권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여금 규제 방안이 EU 조약에 위배되는 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친 상태이며, EU에 대한 고소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.

- 반면 동 규제안은 독일·프랑스 등 대다수 국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, 현재의 은행권 상여금 지급이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인수의 유인이 된다는 점에 대해 EU 회원국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전해짐.

- 스위스는 지난 3일 기업 경영진의 보수를 주주들이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, 이에 대해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찬성의 뜻을 표시하였음.
 - 현재 독일에선 주주가 경영진의 임금결정에 참여할 수 있지만 주주의견이 강제 사항은 아님.
 - 프랑스 정부는 고소득자에 대해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데, 정부가 더 직접적으로 기업 경영진의 보수를 제한할 수 있음을 표명하였음.

■ 동 규제안은 4월에 예정된 유럽연합 의회에서 바젤III 채택과 함께 다시 논의될 예정임.

- EU는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부터 발효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, 동 규정의 시행으로 은행들의 과도한 위험인수를 억제하고 자본건전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
(한국경제, Financial Times 등)